

# 大學發展의 특성화를 위한 小考

金 日 秀  
(高麗大 法學科)

우리 대학이 專門 敎育機關으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발전하자면 擴張보다는 少數精銳化의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의 경영자와 소유자는 대학발전의 長·短期 計劃에서 '重點 분야'를 결정하는 冒險을 해야 한다. 이러한 모험 위에서 발전의 터를 마련해 갈 때에야 비로소 오늘날과 같은 序列化된 대학의 位相에서 겪는 좌절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이 곧 대학발전의 質的 分化이다.

## 1. 들어가는 글

대학은 마치 사회와 역사 속에서 살아 숨쉬는 생명체와 같다. 대학에는 고유한 精神이 있고 조직과 제도로 얽혀진 몸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학은 성장하고 발전해야 한다.

우리나라 대학의 歷史는 일천하기 그지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양적으로 놀라운 성장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대학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고급인력을 배출해 내는 전문 敎育기관이기 때문에 대학에 거는 사회의 기대는 대단하다. 게다가 왕성한 敎育열에 힘입어 대학의 양적 성장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셈이다.

그런데 문제는 대학의 質的 成長이다. 매머드 캠퍼스에 수만 명의 학생들을 수용하고서도 학문과 사회발전의 수준을 능가하는 연구와 교수가 대학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속빈 강정과 비전할 만하다.

대학이 질적으로 성장하자면 무엇보다도 대학 敎育의 內實化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 敎育의 내실화는 우수한 연구·교수 인력과 시설의 확보를 전제로 한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의 대부분이 私立이고, 그 재정은 재단의 출연금보다는 거의 전적으로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솔직히 시인한다면 대학 敎育의 내실화 요구는 한계에 부딪치지 않을 수 없다. 자연과학과 의학 분야는 국가나 산업체로부터 연구지원금이 투입되지 않는다면 세계적인 발전 추세를 따라갈 수 없다. 정선과학과 사회과학 분야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급속히 발전하는 선진국 수준에 접근하자면 연구인력과 자료수집의 집중 투자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것은 계속적이고도 장기적인 투자이어야 한다.

제정난에 허덕이는 우리나라의 대학에서 이러한 사회적인 요구에 부응하는 질적 향상을 이룩하자면, 오늘날과 같이 획일화되고 평판화된 대학의 발전 프로그램부터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미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사회적인 평가에 의해 고정된 序列이 매겨져 있다. 높은 서열의 대학은 선두에 서서 뒤따르는 많은 대학들에 발전 모델로서 직접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런 까닭에 우리나라에는 많은 대학들이 있지만, 실제 多樣性이 없다. 많은 사립대학과 특수 설립 목적을 가진 대학조차 독자적·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분야가 뚜렷하지 못하다. 각 대학이 독자적인 특색을 내세울 만한 중점분야가 있어서 그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현재와 같은 획일화·평판화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내실있는 질적 발전을 향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다.

대학의 획일화와 그로 인한 전체의 책임은 지금까지 대학교육 전반을 주도해 온 교육당국의 근시안적 교육정책에도 있다. 아직도 교육부가 주관하는 획일화된 입시제도가 대학의 다양한 학생선발을 제약하고, 그것이 특색있는 학과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획일화 현상에 대한 제 1차적 책임은 대학 스스로가 져야 한다. 지역적 특성과 전통적 특성을 살려 특색있는 학과를 개발하고 중점 육성하여 각 대학이 개성있는 大學人을 양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더라면 오늘날 우리 대학의 전반적인 수준은 향상되었을 것이고, 대학들이 형식적인 위계로 서열화되어 균형 발전에서 이탈하는 편중현상은 극소화될 수 있었으리라고 본다.

문제는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나라 대학이 이제부터 어디를 향해 어떻게 방향을 정해 나가야 할 것인가이다.

## 2. 大學發展의 普遍性과 特殊性

대학은 고급 전문인력 양성을 중요한 임무의 하나로 삼는다. 이러한 고급 전문인력 양성은 단순한 고급 기능인이나 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대학에서 고등교육을 통해 기르

는 전문인력은 대학이 보편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자유와 진리의 이념에 따라 자유롭게 思考하는 창조적 지성인, 자유로운 만큼 개인적·사회적 책임을 질 줄 아는 지성인, 합리적 사고에 따라 판단하고 과학적 지식에 따라 행동하는 지성인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지성인은 사회발전과 국가발전은 물론 인류보편의 문화발전에 창조적으로 참여하고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정상적이고 표준적인 사람이다. 진진하게 생각하는 보통사람이 진진한 사회생활을 하는 데 표준이 될 행동규칙을 창출하고 실천 수범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러자면 대학인의 인격은 개성과 함께 사회성과 인류보편성에 대한 자각과 신뢰를 갖추어야 한다.

자기 자신의 윤리적인 발전과 완성을 위해 노력하는 개인적인 삶의 열매 이외에, 다른 사람과 더불어 역사발전과 공동체 이익을 위해 진력하는 사회적인 협동의 삶의 열매를 대학인은 맺어야 한다. 이점에서 대학인은 단순한 전문 직업인이나 고급 기능인력과는 구별된다.

이러한 대학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마다 교육 프로그램 속에 대학인이 갖추어야 할 보편적인 기본 전문지식을 담아야 한다.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은 이 수준을 능가하는 데서 출발해야지, 이 수준을 逸脫하는 편법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교육행정도 바로 이 보편성의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보충적인 지도와 감독에 머물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학교육은 이 보편성의 수준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도 너두나 인색하지 않았는가 반성해 볼 일이다. 공정하게 사유하는 보통사람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행위규칙을 대학교육에서 소홀히 한다면, 대학은 전문적인 지식기사(technokrat)를 양산해 낼 수는 있어도 사회와 민족과 역사 앞에 공동체적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인간다운 사회건설을 위해 진력하는 지성적 전문인력을 배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현재 4년제 대학 교과과정에서조차 인접 분과학문에 관한 교양지식이나 타분과학에 관한 교양을 섭렵할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대학에서 고도의 전문경영 기술을 익

현 사람들이 그간의 사회적 경험의 축적을 토대로 중요한 기업경영상의 전략을 수립하면서도, 때로는 탈세와 밀수, 탈법과 국민정서를 생각지 않는 외국 상품의 판매 대리점화 등의 문제를 야기하기 쉽다. 오늘날 대기업이 지탄받고 있는 부동산의 독·과점, 문어발식 기업확장이나 수서사건, 대구 폐놀사건 등도 대학의 관문을 거쳐간 전문경영인들이 보편화된 정상적 평균인의 행위규칙을 소홀히한 채 전문인적 기교에 빠져들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고도 산업사회로 발전해 나가고, 국제화 사회로 진입해 나가면 나갈수록 역사와 민족과 환경과 인간에 대한 각자의 責任은 더욱 막중해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학교육에서 교양과목에 대한 적절한 배려와 교양과목 담당 전문 교수요원의 질적 향상을 위한 투자도 합리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대부분 교양과목을 대학원생과 같은 강사들에 맡겨버리면 이 분야에서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보편성과 관련하여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점에 대해서도 교육행정 당국은 일시적인 편의와 고식적인 목표를 위해 직접 개입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윤리 과목과 같은 國策 과목이 대학에서 확립적으로 교수되는 동안 우리 대학생들은 오히려 비공식적인 통로를 통해 좌경이념에 물들어 갔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대학의 교양교육은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 권위적이 아니라 대화적이어야 하고, 주입식이 아니라 토론적이어야 그 실효를 기대할 수 있다. 대학생들은 교육의 수동적 주체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주체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대학발전의 特殊性에 관한 문제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대학의 모형이 백화점 상품진열식이라는 지적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사립·국립을 가릴 것 없이 대학의 大型化 추세와 천편일률적인 학과의 배치를 볼 수 있다. 사회과학, 인문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학, 사범계, 예·체능계 등은 종합대학이던 거의 빠짐없이 설치되어 있을 정도이다. 이같은 나열식 학문구성은 아직 우리나라 대학교육이 사회발전의 변화

에 따라 요구되는 장·단기적 전문인력 양성에 있어서 기능성과 신축성 있는 관점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다시 말해 대학마다 내노라 할 만한 중점적인 학문연구 분야가 없다는 것이다. 특성과 개성 없는 현재의 대학모형은 장기적으로 볼 때 대학의 발전을 위해 염려되는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자연과학과 의학, 농학 분야에서 첨단기술을 도입·습득시키는 걸 높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자면 막대한 財源이 소요된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한 재원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담당해야 할 막대한 것이어서, 지금과 같은 재정형편으로는 사립대학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대학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이 분야를 확장해 가는 추세에 있는 것은 대학의 현상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자원조달을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과, 학생 수를 교육행정 당국이 옮겨주고 필요에 의해 학생증원을 허가해 주는 실정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물론 질적 향상과는 무관한 것이다. 교육행정 당국조차 학생증원 허가에 있어서 교육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고려하기보다는 대학재원 충당의 일환으로 增員이 환용된다는 고정관념이 있는 것은 아닌가 추측된다.

현재 사립대학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대학의 질적 향상을 이 특수성 모델에서 이루자면, 국가와 사회가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양성에 있어서는 국가의 사립대에 대한 시설확충 지원이 과감하게 확대되어야 할 뿐 아니라, 산업체의 사립대학 지원이 현재 수준보다 더 유리하도록 稅法과 稅制의 손질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국가적인 전문인력 양성 과제를 전문 교육기관이 위임받아 해결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국제적 수준의 자원으로 양성해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도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시설의 보완·확충은 부득이하다.

이와 더불어 기초학문 분야에 대해서 대학과 국가가 공동의 관심을 가지고 장기적인 투자를 벌여 나가야 되리라고 본다. 자연과학에서 수학·물리·화학 분야는 물론 사회과학·인문과학 분야에서도 철학·심리학·사회학·경제학 분

야는 연구소의 설립을 통해 중점적인 과제들이 대학연구소의 활동과 더불어 연구되도록 인적·물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이 분야에서 비중있는 발전을 보이고 있는 대학연구소들이 있기는 하지만 너무나 빈약한 실정이다. 법학분야만 볼 것 같으면, 일정한 수준에 올라있는 법과대학이면 모두 다 하나씩 법학연구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소가 제 기능을 수행하려면 먼저 전문화·세분화되어야 한다. 민법학, 형법학, 공법학, 소송법학 등으로 그 전공연구 분야별로 세분화되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연구를 수행할 만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감판단 있는 연구소 하나에 연 2,3천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무슨 연구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전공교수 개인이 혹사당하지만 팀웍이 없는 이러한 현실에서는 정년을 10년 앞두고서도 무老하는 교수가 얼마나 많은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연구하지 않는 교수가 정년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만이 대학의 정상적 규례가 되어 버린다면 새로운 後進들의 연구와 발전의 기회를 막는 일일뿐만 아니라 인력과 재원의 낭비도 된다.

따라서 대학은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학문발전 추세에 따라갈 수 있는 인재를 확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인재를 단기간의 소용만을 위해 혹사해서도 안 된다. 연구소제도를 세분화·활성화해서 연구교수에 연구조교와 직원이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교수는 정년까지 연구를 계속할 수 있고, 세계적인 학문발전과 공동보조를 맞추어 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초공사 없이 진리탐구와 자유와 창의성을 대학이념으로 구가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학은 1세기 동안 이러한 추상적 미래음악만을 구가해 왔다. 이제 대학역사 2세기를 바라보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대학들이 세계 속의 대학으로 자리잡자면 구체적인 기초공사부터 다져 나가야 한다. 연구 없는 강의, 강의 없는 연구만의 교수를 생각할 수 없다. 연구와 강의를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대학

은 교수활동의 자양분이 되는 연구소제도를 선진 서구의 대학제도에서 필요한 만큼 배워와야 한다. 이러한 전망과 미래를 위한 모험과 투자 없이는 우리 대학은 쇠퇴기에 접어들고 말 것이다. 5~6백년의 역사를 지닌 서구의 대학역사가 보여주듯, 사회와 역사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학문정신이 제대로 열매맺지 못한 채 벌써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는가.

대학이 전문 교육기관으로 대학다운 위상을 지니고 발전하자면 확장보다는 소수 정예화의 노력과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연과학 분야도 당장 필요한 산업인력의 수급은 2년제의 전문대학이나 3년제 또는 4년제의 산업대학 제도를 병행하여 해결해 나가야 한다. 대학은 고급인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새로운 연구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 그러자면 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집중투자와 정예화 과정은 대학이 당분간 지향해야 할 방향이 아닌가 생각된다.

모든 공과대학과 이과대학이 다 평판화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어느 대학의 어느 연구소, 어느 대학의 어느 학과가 다른 대학에 비해 인적·물적 자원이나 그 연구성과 면에서 세계적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그 대학의 特性을 높이는 일일 뿐만 아니라,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효율적인 방안도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과학·인문과학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지역적·사회적 특성에 맞추어 연구분야를 소수 정예화하여 그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를 계속하는 것은 그 분야의 연구성과를 높이는 일이고, 그것이 또한 한 대학의 특성을 좌우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면에서 다 발전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어느 면에 집중하면 그 부분의 발전은 다른 대학의 발전을 앞지를 수 있다. 그러한 特性化의 범위확정은 물론 대학의 특수 사정과 설립 목적, 지역적 환경, 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것은 현재와 같은 대학의 의식수준과 의사결정 수준, 행위양태의 수준에 비추어 본다면, 대학 경영자와 소유자의 철학이나 미래전망의 예견력에 의존하는 바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대학 경영자와 소유자는 대학발전의 장·단기 계획에서 중

점분야를 결정하는 모험을 해야 한다. 모험 없이는 발전도 없다. 이러한 모험 위에서 중점육성 분야에 대한 장·단기적인 투자가 행해져야 한다. 그러한 투자의 성과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될 때 우리 대학은 오늘과 같이 서열화된 대학의 위상에서 겪는 좌절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대학발전의 質的 分化이다.

### 3. 맺는 말

대학이 질적으로 분화되어 특성있는 발전을 하면서 이른바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획득할 수 있으려면, 대학교육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일정 교육분야는 국·공립 또는 사립의 전문 교육기관으로 이양되어야 할 것도 많다. 이를테면, 사범계는 사범대학이란 특수대학을 설립하여 전담시키든지, 아니면 일반대학 이수자로서 교직과목을 이수한 자에 한해 자격시험을 통해 교사자격을 취득하게 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교원양성 전담 교육기관이 있는데도 대학마다 사범대학을 두고, 또한 교직과목 이수자에게 교원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는 교원의 수급조절을 어렵게 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잃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예·체능계도 전문적인 예·체능 인력양성 기관을 별도 설립하여, 오늘날의 일반대학 예·체능계 시험과 같은 불합리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대학은 이 방면의 이론적 연구에 그치고, 기예의 연마는 이러한 전문 교육기관에서 별도의 선발기준에 따라 별도의 교육을 시키고 별도의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현재 이에 관한 제도가 진척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대학교육 개선과 대학발전의 마스터플랜 안에서 종합적으로 검토·시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밖에 종교재단 설립대학의 특수성 제고에 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종교재단에 의해 설립된 대학은 非종교재단 대학에 비해 고유한 설립목적이 있을 것이다. 종교재단 설립대학이라고 해서 대학교육이 지향하는 보편성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넘어선 차원에서

는 일정한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겠고, 이 범위 안에서 특성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그밖에도 실용성 있는 사회과학·인문과학 분야에서도 자연과학 분야에서의 산업대학과 같은 계도를 적용한다면 특성있는 대학의 창출과 발전이 가능하리라는 생각이다. 한국의 초기 대학들은 이러한 모형에 의해 발전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연희전문이 수리·인문 분야에 관심을 기울인 반면, 보성전문이 법과 재경 분야에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 그 일베이다. 오늘날 새로 설립되는 대학이나 아직도 창립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대학도 이같은 모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무대학, 행정대학, 경영대학, 노동대학, 무역대학, 통역인대학, 국학대학 등에서 전문분야에 필요한 전문 고급인력을 양성해 나가는 방안도 고려해 볼 일이다.

대학이 연구와 교육의 質에 의해 종합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시기가 속히 와야 한다. 그 시점을 빨리 끌어 당기는 것은 현재 대학의 운영과 학사에 관여하는 대학인뿐만 아니라 연구와 교수에 종사하는 모든 대학인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 구조화된 서열과 위계가 질 향상과 경쟁에 의해 깨뜨려지지 않는다면 대학발전은 담보상태에 머물 뿐 아니라 쇠퇴하고 말 것이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대학인 모두의 창조적 의식과 진취적 모험심 그리고 열린 마음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勇氣이다.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는 대학인이란 대학의 현실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지평을 넘어 미래의 전망을 열기 위해서는 우리 대학인 모두가 현재 대학의 태평성대의 같은 대낮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밤의 어둠과 새날의 여명이 교차하는 새벽 속에 살고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미래의 전망을 열기 위해서는 연구인력과 교수의 충원·확보부터 公開된 방법과 公正과 眞實이 지배하는 원칙으로 행하여져야 한다. 출신대학별로, 본교출신만으로는 保護主義가 무너지지 않는 한, 설립 많은 재정적 지원이 선행된다 하더라도 학문의 발전과 연구의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